

# 하남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
|------------|------|
| 의 안<br>번 호 | 2247 |
|------------|------|

발의연월일 : 2021년 5월 18일

발 의 자 : 이영아 의원

## 1. 제안이유

- 하남시 공공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산부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임산부를 배려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 나. 적용범위 및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 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주차자동차 이동 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 4. 관계법령 발췌서

-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5. 입법예고 결과

- 가. 입법예고기간 : 2021년 5월 18일 ~ 5월 26일
- 나. 의견 내용 : 의견없음

## 6. 부서협의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하남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의 이용편의를 도모하여 임산부를 배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임산부 탑승 자동차” 이라 한다)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남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주차장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① 시장은 제3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임산부의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하남시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여성우선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산부 우선주차 구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경우는 바닥 또는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①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재발급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8조1항에 따라 임산부 신고를 한 때에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임산부 한 명당 한대의 자동차를 임산부 탑승 자동차로 등록하고 그 사실을 관리대장에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유효기간은 분만예정일 후 6개월까지로 한다.

⑤ 시장은 임산부 자동차 표지에 유효기간 등을 명기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이용)**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임산부가 탑승하고 있어야 하고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자동차 앞면에 부착 하여야 한다.

**제7조(주차자동차 이동 권고)**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하였거나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해당 주차장을 개·보수할 경우부터 적용한다.

## □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可妊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未熟兒)”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7.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8.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삭제 <2017. 12. 12.>
10.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11. “난임(難妊)”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

하는 상태를 말한다.

12. “보조생식술”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5. “공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의 자연공원

나. 「자연공원법」 제2조 제10호의 공원시설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도시공원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공원시설

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7.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8. “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의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조의2 제1호의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